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차례 ▶▶▶

공감 소개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04 인권법캠프
06 월례포럼
08 자원활동
10 청소년 인권강좌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공감 12

2014 공감의 활동 16 여성인권
19 장애인권
23 이주·난민
27 빈곤·복지
30 국제인권
33 취약노동
37 성소수자
41 공익법 일반
45 공익법 교육·중개

공감이 걸어온 길 48

공감 살림살이 50

2014 기부회원 인터뷰 52

함께하는 사람들 - 이사회 54

함께하는 사람들 - 구성원 56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1월,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출발해 2012년 12월,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은 공익과 인권, 법, 그리고 공감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 마당 - 소동라 참여
[인권법캠프]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57명이, 2014년 7월에는 87명이 참석하여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마당 - 소동라 참여
[월례포럼]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감 월례포럼은 다양한 인권문제와 고민이 담긴 자리입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는 공감 월례포럼은 2014년에는 19기, 20기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준비 했습니다.

-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
_ 김현미 - 연세대 인류학과 교수 (2014.1.14)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및 인권
_ 김사강 -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14.4.25)
- 정신장애인,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에 관한 논의
_ 이정하 활동가 - '파도손' (정신장애인 문화예술협동조합) / 영화 '위캔두 댓' 상영 (2014.5.30)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_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14.7.24)
- 웹툰, 노동과 사람을 이야기하다
_ 최규석 - 웹툰 '송곳' 작가 (2014.11.5)
- 우리시대의 여성 혐오: 신자유주의, 미디어, 젠더
_ 손희정 - 영상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2014.12.12)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자원활동]

공감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률 문헌리서치와 운영, 홍보로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공감의 활동들을 채워줍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이 나눠준 땀과 열정으로 공감은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감 19기 자원활동가

권준희, 김기석, 김다훤, 김명호, 김민국, 김범준, 김병인, 김옥향, 김정우, 김주연, 김효빈, 박다혜, 박선희, 박진호, 양유미, 오경민, 이지현, 이한재, 최서연, 한지수

공감 20기 자원활동가

김나경, 김소연, 문영주, 박효민, 변재원, 송다솜, 안항린, 이가연, 이동혁, 이소담, 이예지, 이재영, 임대섭, 장지원, 조동완, 주선하, 최윤정, 한동희





공감 마당 - 소동과 참여

[청소년 인권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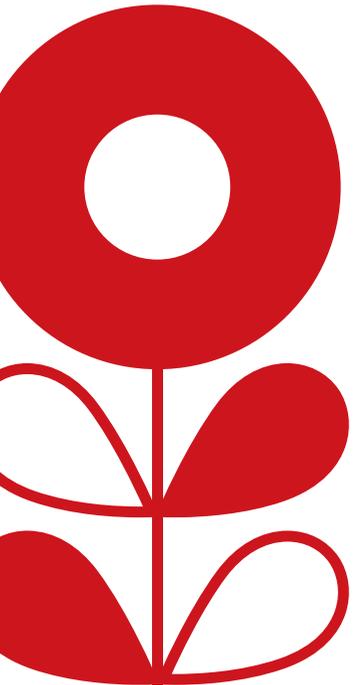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공감은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궁금증을 풀어놓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구체적인 질문들은 공감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공감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큼니다.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만나는 자리,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의 책임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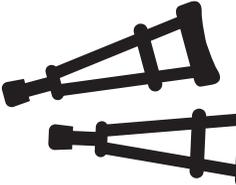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미군 주둔지 주변에는 미군을 주고객으로 하는 상업지구인 기지촌이 있으며, 기지촌에는 미군 클럽과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기지촌의 성매매여성을 공식적으로 법령과 공문서에서 ‘위안부’라고 칭하고 이들에게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한미친선과 경제를 살리는 애국행위라고 교육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4년 6월 25일, 전국의 미군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공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 위원회와 미군문제위원회에서 구성한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일원으로 1년여의 소송 준비, 소송설명회, 소장 제출 후의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국가가 법률로써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미군 기지촌의 ‘위안부’에게는 성매매를 권유하고, 미군이 성병 감염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성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2012/07~2015/01 인신매매 피해 태국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원고 일부승소)
- 2013/10~2014/09 낙태로 기소된 여성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낙태죄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여성의 공동변호인단으로 무죄를 닦는 항소심 변호를 하고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항소 기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간)
- 2014/03~(진행중)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았던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으로 회사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
- 2014/09~(진행중) 시부 성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소송 공동대리인단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이 시부의 성폭력으로 파탄났으나 남편은 오히려 여성의 어린 시절 약탈흔에 의한 강간 피해와 그로 인한 출산 사실을 결혼 당시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여성 상대로 혼인취소청구한 사건에서 이주여성 대리



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프로젝트

공감의 활동

장애인인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공감이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프로젝트에 이어, 2014년 두 번째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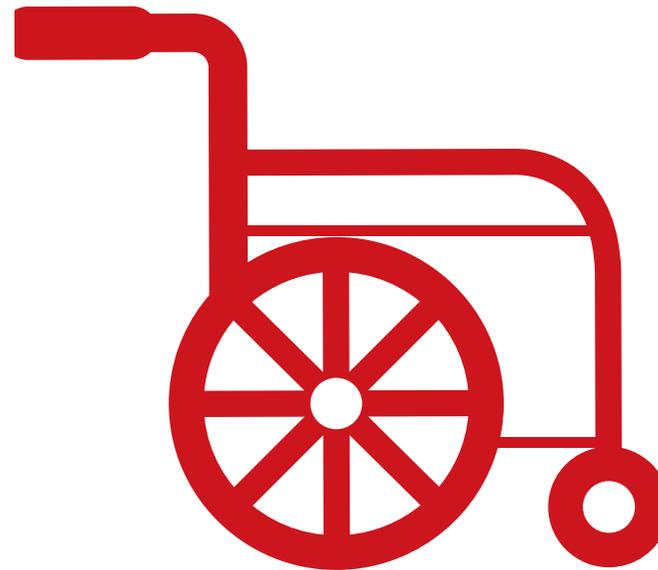
장애여성 공감 등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들과 함께 판례분석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된 판결 세미나를 일곱 차례,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장애인 상담소권역의 현장 상담활동가와 집중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여,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를 만들었습니다.

<활용서>에는 장애인 성폭력 유무죄 판결을 가르는 지점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사법절차 지원시 도움이 될 만한 실제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전국의 현장 활동가들이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활용서>는 대한변협 사랑샘재단과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2014/03 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프로젝트 준비회의
- 2014/04/09 판례분석 연구모임 1차
- 2014/05/21 판례분석 연구모임 2차
- 2014/06/25 판례분석 연구모임 3차-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권역소장단 회의 발표
- 2014/07/09 판례분석 연구모임 4차
- 2014/09/03 판례분석 연구모임 5차
- 2014/10/07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현장활동가 FGI(초점 그룹인터뷰) 1차
- 2014/10/14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현장활동가 FGI(초점 그룹인터뷰) 2차
- 2014/10/29 판례분석 연구모임 6차
- 2014/11/12 판례분석 연구모임 7차
- 2014/11/20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집필 회의
- 2014/12/01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표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최초의 차별시정판결

전북 군산의 모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원고를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오히려 직급이 낮은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민원부서의 창구업무를 맡겼습니다. 공감은 원고를 대리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보직 임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승진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하라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장애

인 직원에 대한 승진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최초의 차별구제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차별시정판결을 계기로 비장애인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또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 2014/04~10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 선거권 실태조사 연구
- 2014/07 서해대학 직원 진급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승소
- 2014/07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입원 거부에 대한 인권위 차별진정 제기
- 2014/09~12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작업
- 2014/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심의 참가
- 2014/11 시각장애인 용산역 추락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4/12/01 HIV/AIDS 감염인의 법정장애인 지정 타당성 토론회 발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보건시설에는 8만여명의 시민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하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마저도 강제입원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및 정신보건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자의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해서는 안 됩니다.

- 2014/01/14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4/02~12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14/03/28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토론회 발제
- 2014/05/30 공감 월례포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에 관한 이야기'
- 2014/10/31 OECD 국제 정신보건 심포지엄 토론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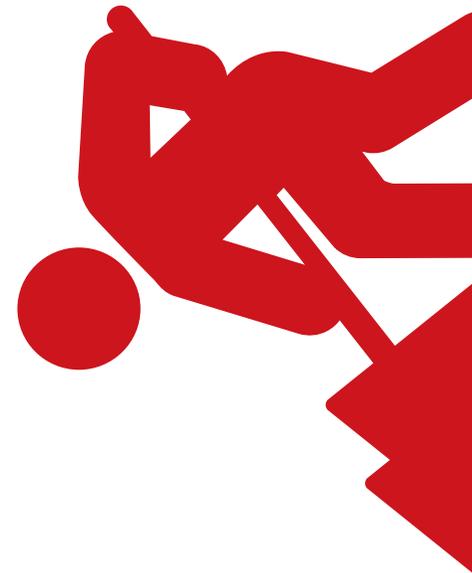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 씨(장애 5급)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씨를 비롯하여 신의도에 갇혀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한 피해 장애인들의 수는 65명에 달하였습니다.

공감은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피해장애인에게 법률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법률개정 TF

에 참여하여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임금청구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발의 했습니다. 제2·제3의 염전 노예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감의 활동

이주·난민



- 2014/01 지적장애인 강압수사 절대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4/02-10 염전노예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14/08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구 이사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승소)
- 2014/09-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연구
- 2014/09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건물철거소송 1심 승소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동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12. 31. 국회는 불법 체류를 줄이겠다며 이주노동자에게는 출국 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이주노동자들 및 단체들과 함께 대응 모임을 꾸리고 서명 운동, 헌법소원, 법률 개정안 마련, 국회의원 면담,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벌써 제도가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4/04~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14/04~10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 2014/05~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및 진행
- 2014/05~ 국회 및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 2014/06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면담
- 2014/06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 면담
- 2014/06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 2014/06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14/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한국 체류 난민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법률지원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우려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난민사건의 쟁점은 난민에 해당하는지, 즉, 위에서 열거된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그리고 출신국가의 전반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습니

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확신이란 애당초 있을 수 없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공감은 2014년에도 국내 체류 난민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법적 공방과 법원관결을 통해 난민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또한 국내외의 난민지원 및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난민 소송 지원]

-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인도적 체류허가 받음
- 파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소송 대리
- 파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이의신청 대리
- 미얀마 출신 난민신청자 소송 대리(4건)
- 콩고 출신 난민신청자 난민신청 대리
- 중국 출신 난민신청자 소송 대리
- 중국 출신 난민신청자 보호일시해제 신청 대리해서 보호일시해제 결정 받음

[난민네트워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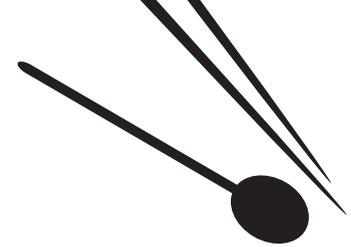
- 2014/09 제5차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 참가
- 2014/09 재단법인 동천 주최 난민법률지원교육 강의
- 2014/1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토론

이주아동에게 차별없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정부는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인 보호와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아동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속과 강제추방의 공포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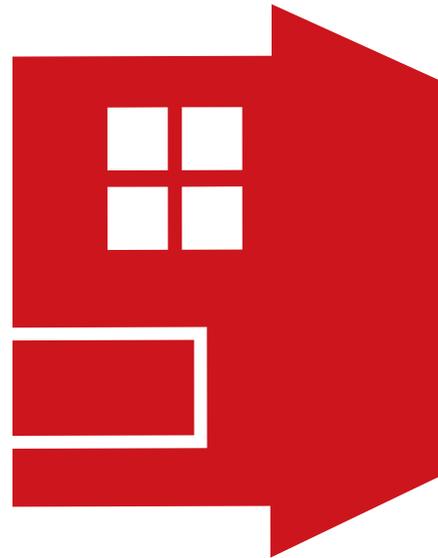
공감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불법' 체류 상태인 부모들이 체류연장을 위해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소극적입니다. 과연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아동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 중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공감의 활동

빈곤·복지



- 2014/02~12 이주아동권리보장 네트워크 정기 회의
- 2014/03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발표
- 2014/0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 2014/04 공감 월례포럼-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및 인권
- 2014/06 외국인 인권 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4/12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 면담
- 2015/01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담회

홈리스 불법유인 요양병원 형사고발

아파도 몸을 누일 따뜻한 잠자리조차 없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돈벌이 계기로 삼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들 정신병원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접근해서 술을 사주거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유인하고 차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 중 인천소재 한 정신병원의 경우 2013년 기준 누적 입원환자 중 노숙인 비율이 42.1%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원한 홈

리스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리와 강박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와 공감은 2014. 7. 해당 병원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의료법, 정신보건법 위반과 사기, 횡령, 영리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 2014/04 공감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체 합류
- 2014/05-06 요양병원 관계자 면담
- 2014/07 홈리스 약취·유인 요양병원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및 고발장 접수
- 2014/10 요양병원 이용 홈리스의 복지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발주: 대한변협인권재단)
- 2014/12 요양병원 이용 홈리스 복지권 실태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 2015/02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중심으로 본 홈리스 복지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 2015/02 요양병원 이용 홈리스 복지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악 대응 활동

2012년 5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 하겠다면서 의원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내놓 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문제의 진단 과 해결책은 매우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소득 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 든 지원을 받는 “all or nothing”이 현 제도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지금까지 수급권의 기준 이었던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기하고 생계급 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부처별로 해체 하여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all or nothing”이라는 진단은 기초생활수급 자들이 “minimum”을 보장받는 사실을 호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권리를 해체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발상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빈곤사회 연대, 참여연대, 공감 등 47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 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여당에 서 추진한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원안보다 약간 개선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2014년 하반기 국회에 서 통과되어, 201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 니다.

- 2013/07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결성 및 활동
- 2014/02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발족 및 운영위원회 활동
- 2014/03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3법 졸속 추진 기자회견 개최
- 2014/04 ‘아는 것이 힘! 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 토론회
- 2014/05 용산역 앞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선전전
- 2014/07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거리상담

공감의 활동



국제인권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한국의 인권 후퇴를 논하다

공감은 2014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지원을 받아 참가단 자격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습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언급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시비쿠스, 포럼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 경향, 과제 및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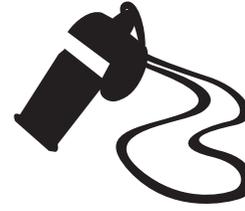
유엔인권이사회 공식세션 참가 외에도 여러 특별보고관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담당관들을 만나 2만 5천명이 거쳐 간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구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전문성 결여, 강화되는 외국인 혐오주의, 전 세계 피구금자의 90%가 한국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 사할린 강제이주 과거사의 미해결, 해외입양 시의 인권침해 문제, 집회 시위의 차별 설치,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등 특히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양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 2014/03/10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 참가, NGO 구두발언 자문 / OHCHR 건강권 담당관 면담
- 2014/03/11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 참가 / 국제민주변호사협회 (ADL, 국제인권변호사단체) 변호사 면담 / OHCHR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의사표현의 자유, OHCHR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 주제네바 대표부 정무대사, 참사관 면담
- 2014/03/12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 참가 / ESCR-Net, OECD Watch, Norwegian Forum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기업인권감시 국제NGO들) 면담 / OHCHR 진실과 정의(과거사) 담당관 면담 /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Side Event 참가
- 2014/03/13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 참가 / OHCHR 자의적 구금, 인종차별, 자유권규약, 국가인권기구, 집회·결사의 자유 담당관 면담 / Global Detention Project (국제피구금자인권 NGO) 관계자 면담 /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국제정보기관감시 NGO) 관계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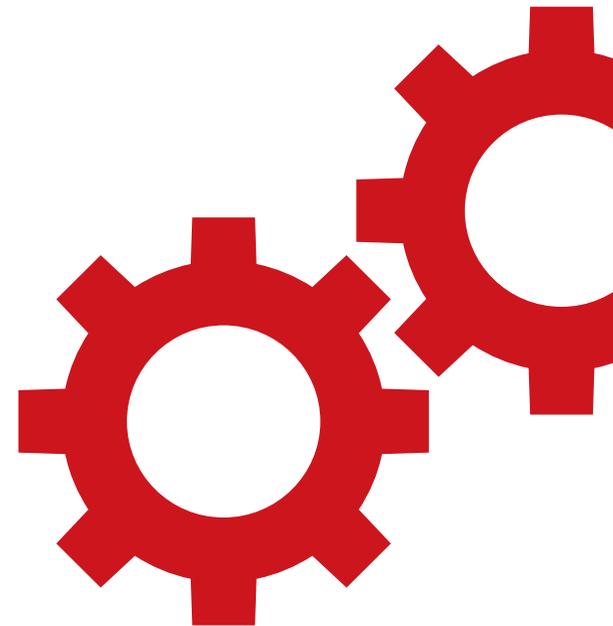
방글라데시 봉제산업 진출 한국기업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 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노동조합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현지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해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건물을 지어주었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기준과 규범을 준수할 때에만

이윤추구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기업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은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그 중 방글라데시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국내외 노동자,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공감의 활동
취약노동



- 2014/06-07 리서치, 회의 등 실태조사 사전준비
- 2014/08 방글라데시 현지조사(다카와 치타공 소재 활동가, 노동자, 노동단체, 노동부, ILO, ACCORD, 한국기업, 한국대사관 관계자 면담)
- 2014/09-11 현지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2014/12 보고서 발표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발로 뛰다

아파트 경비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당 60시간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직접 수백, 수천 명의 입주민을 대면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6개월,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아파트 경비원이 간접고용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회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눈 밖에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감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를 중심으

로 보다 가까이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만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모욕에 힘들어하다가 분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과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도 하였습니다. 대량해고의 위기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작년 말에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싸웠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공감은 2015년에도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2014/05~ 노원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 (경비원 모임, 법률 상담, 교육, 소식지 배포, 개별 면담 등)
- 2014/07 민원을 이유로 한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2014/10~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분신 경비원 및 가족 법률 지원
- 2014/10~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 사건 해결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 활동
- 2014/10 민주노총 일반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토론 참여
- 2014/10 은평노동복지센터 주최 '아파트 경비원 관련 좌담회' 강연
- 2014/11 참여연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 좌담회
- 2014/11~ 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활동
- 2014/11 국가인권위원회 아파트경비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 저문
- 2014/11,12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선전전 등 대응 활동
- 2014/12 서래마을 경비원 부당해고 사안 법률지원
- 2014/12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분신 경비원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2014/12 노원구 경비원 집단해고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면담
- 2014/12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연석회의
- 2014/12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검토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기

2014년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6월에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폭력적으로 난입하여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장에서도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폭력과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 증진을 시킬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을 폐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감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집회방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였던 서대문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하고,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방해행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동성애 비하 발언을 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항의하고 헌장 선포를 촉구하는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사업으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불용시킨 김영배 성북구청장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성북무지개행동과 함께 후속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4/0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
- 2014/06 서울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부스 참가
- 2014/06 대구 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 2014/12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항의 및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촉구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단 활동
- 2014/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정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시킨 김영배 성북구청장 항의 기자회견 및 성북무지개행동 활동

성소수자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2013년 10월 31일,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어떠한 사회적 인정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커플은 이성커플과 달리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응급상황에서도 혈연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파트너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장례절차에서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

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도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공감은 2014년 5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법원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캠페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4/01~ 동성혼소송 공동변호인단 회의
- 2014/01~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활동
- 2014/05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소제기 기자회견
- 2014/06 서울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부스 참가
- 2014/07 국회성평등정책 주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안 내용 설명과 입법의 효과' 발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만들기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단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청소년의 자살에 대하여 학교가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 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집단 괴롭힘의 특성 및 피해 학생이 처한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SOGI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교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를 하였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활동
공익법 일반



- 2014/02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변론
- 2014/04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주최 제3회 SOGI 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발제
- 2014/0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 2014/06~12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컨소시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 (교사·학생 대상 설문조사 포함)
- 2015/0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활동
- 2015/01~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

4.16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 곁을 지키다

4.16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공감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진도 및 안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법률지원을 조직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협약체결을 기획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세월호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생존 화물기사, 잠수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 등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가족들의 단체 운영, 대내외적인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진상규명 및 배·보상, 지원·추모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는 있었지만, 붕괴된 사회적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피해가족들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수년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2014/04/16 세월호 참사 발생
- 2014/04/19-21 1차 진도 방문
- 2014/04/21-24 안산 방문
- 2014/04/25-27 2차 진도 방문
- 2014/05/03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 교육
- 2014/05/16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협약 체결 및 진상규명 원칙 천명
- 2014/05~ 안산, 국회, 광화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지원
- 2014/06-07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회 모니터링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지원
- 2014/07/16 대한변협 4·16특별법제정촉구 성명발표 참가
- 2014/07/24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발표 참가
- 2014/11/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15/01/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부금품법상 위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구립비 바위를 발파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평화롭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사를 저지하고 해군기지 설치를 무효화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자발적 성금을 모았습니다. 1천만원 이상 모금에 필요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관할관청은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관련 단체와 함께 기부금품법의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모호한 개념규정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익을 위해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는 행위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감의 활동

공익법 교육·증거



- 2014/05 기부금품모집법 미등록모금 처벌조항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 2014/07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가게 기부금품모집법위반 사건 관련 검찰 의견서 제출
- 2014/10~12 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안 전문가간담회 및 의견서 제출
- 2014/12/11 한국모금가협회 주최 모금 실무자 대상 모금관련법 교육
- 2014/12~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기부금품법위반 사건 변론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공익변호사는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국선 전담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법무부 소속 법률상담터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200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업 공익변호사들 대다수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도움을 주고받을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합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공익변호사 한마당을 기획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여명의 공익변호사들이 경기도 장흥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당 이후, 격월로 공익변호사모임을 정례화하여 서로의 정보와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며 때로는 소수자의 인권이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길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 2014/01/09~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등 6회
- 2014/02/19~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회의 등 6회
- 2014/04/29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협약식
- 2014/05/31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 공익법 세미나 발제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 2014/11/14~15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청소년 ·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 예비법조인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공익인권 분야에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익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분야입니다. 공감은 매년 공익인권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청년 및 예비법조인 대상으로 인권법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 로스쿨과 이화여대 로스쿨 2곳에서 임상법학(리걸클리닉) 과목을 지도하였고, 19개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름 · 겨울방학 동안 로스쿨생들의 실무

수습을 지도하였습니다. 공감 설립 초기부터 상반기 · 하반기로 나누어 자원활동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14년에는 19기(20명) 및 20기(18명) 정기 자원활동 인턴십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논의의 장인 라운드테이블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청소년 대상 인권행사인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행사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 2014/01/06~17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 2014/01~12 공감 월례포럼 '별에서 온 그대? 외국에서 온 그대! _ 김현미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 외 5회
- 2014/02/05~07 예비법조인 대상 제7회 공감 인권법캠프
- 2014/02/25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외 1회
- 2014/03~07 공감 19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
- 2014/03/21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단체(HALS, Harvard Asia Law Society) 공감 방문
- 2014/05/09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외 2회
- 2014/08/4~29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 2014/07/18~19 공감 여름 인권법캠프
- 2014/09~2015/02 공감 20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
- 2014/09~12 서울대 로스쿨 임상법학 강의
- 2014/09~12 이화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강의

공감이

걸어온 길



2004

- 국내 최초의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로 첫발을 내딛다
-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사업 시작
총 24개의 이주민 · 여성 · 장애 · 사회복지 단체에 변호사 파견

2005

- 이주민 · 장애인 인권의 현장으로!
국제 결혼 중개 구조 실태 베트남 · 필리핀 현지 조사, 전국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법률교육

2006

- 소송을 통해 소수자 인권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다
장애아동의 보험가입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버마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성차별 ·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사소송
- 한국장애인인권상 및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수상

2007

- 인권 현장 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거듭나다
희망변론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단체와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위한 전국 순회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8

- 공익법 운동의 확산에 시동을 걸다
1회 인권법 캠프, 로펌 프로보노 간담회, 총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협약 중개
-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9

- 주거권 옹호를 위한 변론활동 등 '빈곤과 복지' 영역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다
용산참사 대응, 뉴타운 · 재개발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소송,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노인전문기관 의뢰 부양료 심판 청구, 노숙인 쉼터 설치 · 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010

- 국제 인권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다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장 취임, 이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 · 필리핀 · 일본 이주 프로젝트,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기구 네트워크
-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11

- 사회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의 결실을 맺다
입양특례법 제정, 난민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 법조언론인클럽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 성소수자, 취약 노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활동,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법 연구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법 정책에 관한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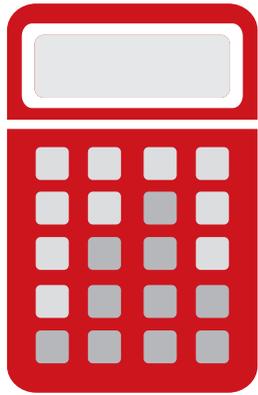
2013

- 새로운 출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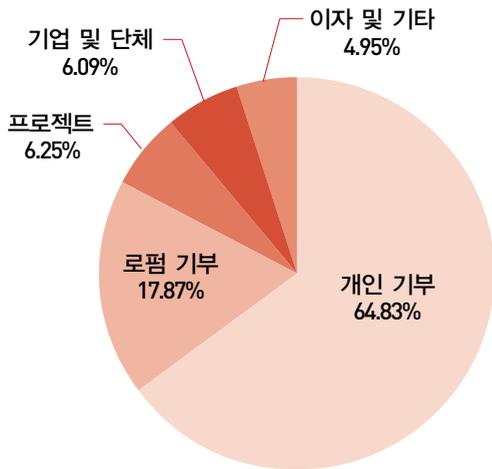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허브가 되다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제1차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변호사모임 정례화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대상' 수상
-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 - 재능나눔부문' 수상

공감



살림살이

수입



개인 기부
424,046,000

로펌 기부
116,9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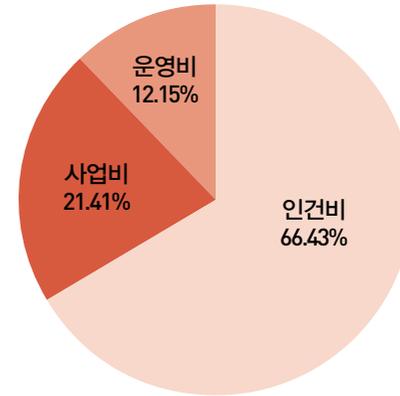
프로젝트
40,909,000

기업 및 단체
39,843,000

이자 및 기타
32,406,000

합계
654,104,000

지출



인건비
481,049,000

사업비
155,055,000

운영비
88,007,000

합계
724,1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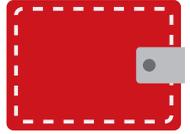
사업비	
교육·중개	20,201,00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24,000,000
법률교육/지원	2,095,000
소송 지원	6,463,000
인권법캠프	20,695,000
월례포럼	3,773,000
연구조사	8,635,000
연구용역	40,909,000
기부회원	26,712,000
홍보	1,572,000
행사	-
소계	155,055,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20,208,000
세금과공과	18,577,000
지급수수료	13,148,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3,960,000
사무실유지비	24,194,000
소계	88,007,000

수입 654,104,000 - 지출 724,111,000 = -70,007,000

2014 공감 기부회원

인터뷰



김포그니 님

'법 위에 잡자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여 공감 1기 자원활동가로 지원했고, 이제는 작은 액수라도 기부행위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만난 분들에게도 공감이나 다른 단체를 소개하고 이어드리며 '나눔의 전이' 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강세라, 강세희, 강경두 님 가족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받은 만큼 다시 베푸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나중에는 직접 후원할 것을 권하고 있고, 아이들도 나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정임 님

공감은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편견 없이 함께한다는 점이 멋집니다.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같은 눈높이에서 옹호해주길 기대합니다.



남영 님

아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의 행복과 인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의식이 먼저堂堂하게 변하기를,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노승진 님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감 청소년행사에서 윤지영 변호사님을 만나며 공익인권변호사의 꿈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재홍 님

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환경법활동가,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도구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할 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넘어 자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사이로직 대표 이태희 님

공동체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더 많은 기업에 퍼졌으면 합니다.



조문성 님

이주노동자를 사진에 담으며 썩든 노동현장에 대한 고민이 공감과의 8년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부당함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한 공감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조이여울 님

일다에서 활동하며 진정성 있는 저널리즘과 여성주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면 소외된 집단의 관점에서 대안적 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 담론과 언론의 윤리에 대한 소통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김기남 님

공감에서의 활동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결혼식에서 엄형국 변호사님이 주례를 서주시는 인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공감은 많이 성장했지만, 공감이 하는 일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펀드레이저 겸 홍보활동가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과 연결해주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윤지영



장서연

엄형국



황필규



소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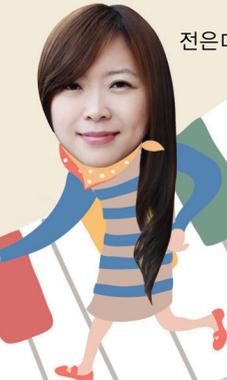
차혜령

박영아

안주영



김수영



전은미



신옥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4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인
안경환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홀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신청]

*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공감의 변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볼 때처럼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외노동자 들을 비롯한 힘없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약자들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희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숙, 소설가〉



주소 110-280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블로그 withgonggam.tistory.com

홈페이지 www.kpil.org